

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대응

KDI 김주훈

- 우리 경제는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지난 50년간의 성장패러다임과 다른 국면으로 진입
 - 과거에는 자본의 수익성이 높아 투자가 왕성하였고 고도성장을 실현. 그러나 투자기회의 저하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
 - 과거에는 선진국에는 이미 보급되었으나 국내 도입이 되지 않은 제품들의 생산으로 투자기회가 높았으나
 - 앞으로는 선진국조차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혁신에 의해 투자기회가 생성되는 수준
 - 그에 따라 성장의 어느 정도 둔화는 수용할 필요
 - 인적자원에 대한 역할이 과거 노동력에서 지식기반으로 변화. 이에 따라 인적자본의 형성에 대한 투자, 즉 양육비용이 높아져 저출산 · 고령화가 발생
 - 국민생활 소비도 내수소비재 등 유형의 재화 구매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포화상태에 들어갔으므로 질적 차이가 수요의 동인
- 따라서 경제성장의 기본축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질적 혁신으로 전환되고 있고 정책의 틀 또한 그에 적합하게 변형될 필요
 - 지금까지 성장동력이 지정되면 정책금융 혹은 세제감면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육성하였으나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려운 방식
 - 벤처, 녹색성장, 미래 성장동력 등에 대한 자원투입, 혹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방식이 작동되기 어려울 것
 - 심한 경우, 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지원 또는 부양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

- 정부의 정책적 대상은 기술, 지식, 서비스, 인적자원 등 무형자산의 신속하고 용이한 축적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흡수해 줄 경우 질적 혁신에 의한 성장이 가속될 수 있을 것임
 - 무형자산은 지적 재산권 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배타적 사용의 공유재 속성을 가짐.
 - 예로서 막대한 교육투자로부터 양성된 인적자원의 취업을 강제할 수 없음. 기초과학은 보편적 지식이라서 상업적 활용을 금지시킬 수 없음
 - 따라서 과거 제조업 혹은 산업화 시기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던 방식처럼 특정 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어려움
 - 특정부문의 집중육성 혹은 불균형적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유재 육성으로 전환될 필요
 -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분야별 융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 이는 아직도 부문간 칸막이가 당연하고 필요한 경우 융복합으로 부문간 접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해석됨
 - 그와 동시에 무형적 자산의 거래는 정부나 지원기관 등 제3자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경제적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
 - 유형자산은 정형화되어 있어 제3자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만 무형자산은 그렇지 못하여 거래 당사자에 의존
 - 현재 경제혁신에서 가장 강조되는 규제개혁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될 필요.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피해집단 혹은 규제당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. 규제는 완화시키되 그 책임은 개별주체가 지게 해야 유효한 추진이 가능할 것임
-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방식에서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는 투입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성과평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
 - 유형자산에서는 외부 평가가 가능하고 투입이 그대로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입의 확대에 정책을 집중할 수 있음.

- 그러나 무형자산에서는 투입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과물(output) 혹은 성과 평가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야 함
 - 교육 혹은 R&D에 아무리 자원을 투입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혹은 성과가 비례적으로 나온다고 기대하기 어려움
- 무형자산에 의한 성장방식에서는 부분적 육성보다 전체적 정합성의 유지가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
 -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부문간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적 정책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점검 및 평가이 부분적 정책단위의 추진과 함께 반드시 추진될 필요
 - (예) 서비스산업 v. 제조업, 녹색성장 v. 기존 굴뚝산업, 기초과학/원천기술 v. 산업기술
- 현재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기존 체계의 해체를 두려워하는 이익집단들에 대한 유인 및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며 동시에 무책임한 기존이익 고수에 대해서는 단호한 방향성 제시도 필요
 - 이익집단의 토론과 절충의 장이 될 수 있는 정책토론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책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폭력행위 등이 금지되어야 함